



주간통일정세 2008-39(2008.09.22~09.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언론 관계자, 김정일 와병설은 억측(9/23, 통일언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충한 조선기자동맹 부위원장은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우리 장군님(김정일)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수뇌부를 헐뜯고 비방하는 나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고 6.15 남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의 온라인 매체 '통일언론'이 보도
 - 조충한 부위원장은 개성에서 열린 6.15남측 언론본부 대표단과 북측 언론분과위 대표단간 회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 가지지 마시라”며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일축, 그는 남측 언론 보도에 대해 “일일이 구태여 ‘사실이 아니다. 이렇다’ 고달프게 변명하고 말할 것도 없다”면서 “우린 정상적인 상태이다. (남측 언론에서) 억측에다 보태고 무슨 말을 하겠지만, 다 억측이다”라고 거듭 강조
- **北안경호, 南기관 건강이상설 유포…도발·불쾌(9/24, 연합)**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최근 남쪽 기관이 언론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흘리는 게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짐.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재규 부대변인은 안 서기국장이 23일 개성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장 회의에서 백낙청 남측위 상임대표를 만났을 때 이같이 말하고 “심지어 ‘작전계획 5029’로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6.15정신에 입각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발 아니냐.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고 24일 보도
- **김정일, 생모 사망일 맞아 화환 전달(9/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서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2일 생모인 김정숙 사망 59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 동상에 화환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현화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나. 정치 관련

- **한미 전쟁책동으로 한반도 긴장 팽팽(9/2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라는 제목의 논평에



서 11월 열리는 ‘호국훈련’에서의 한미합동상륙작전연습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더욱더 팽팽해지고있다”고 28일 주장

- 민주조선은 “조성된 사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따라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정당했고 앞으로도 전쟁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 것만큼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매에 짓몽개버릴 준비를 철저히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무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버려야 한다”며 “만일 그들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 때와는 비할 바 없는 강력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샤프 사령관 발언 비난(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파견될 증원군의 신속 전개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노린 미제의 계획적이며 도발적인 책동”이라며 “우리에게는 정당방위를 위한 군사행동의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

● 김정일에 충성하는 혁명가 강조(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북한의 새 세대를 “강성대국 건설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계승할 것과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따르고 받드는 진짜배기 혁명가”가 될 것을 촉구

- 노동신문은 2면에 ‘전 세대처럼 살자’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실고,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다”고 전제하고 “선대에 아무리고 귀한 피를 뿌리며 혁명위업을 개척하였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잇고 그것을 옹계 계승하지 못한다면, 하여날을 따라 고조되어야 할 혁명가의 정신력이 세월의 풍파 속에 쇠퇴하게 된다면 그 혁명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강조

● 北, 한미 군사연습, 보고만 있지 않을 것(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질 군사연습 소동의 위험성을 밝힌다’는 제목의 ‘군사논평원’ 글에서 한국과 미국이 크고 작은 합동 군사연습을 잇따라 벌이며 남한이 “전쟁연습의 난무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미국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동맹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강행하고 있는 모든 북침전쟁연습 소동”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특대형 범죄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으로 온 민족이 다 사라지고 온 강토가 폐허로 된 다음에는 지금 떠돌고 있는 상생과 공영은...이 세상에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개성공단사업은 민족공동 재부 창조(9/2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시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거듭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북과 남이 손잡고 민족공동의 재부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개성공단사업이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북과 남이 손잡고 민족공동의 재부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런 사업에도 남쪽에서와같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하는 기업관리방식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민족과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 통일신보는 이어 “기업체들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삶이고 민족의 통일사업”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

● 北농촌 추수 한창, 인력 총동원(9/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각지 농촌에서 벼 가을(추수)이 시작됐다”면서 “벼 가을에 제일 먼저 들어선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가을과 윤반, 탈곡, 포장 등을 입체적으로 벌여 나갈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밑에 시작부터 벼베기 실적을 올리며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

● 北, 생필품 전시회 개최(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서 인민소비품(생필품) 전시회가 26일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경공업 공장과 중앙기관 산하 공장, 도별 지방산업공장에서 출품한 천과 신발, 일용품, 식료품, 가구류 등이 전시
- 행사 기간에는 제품 품평회와 제조 기술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통신은 보도, 허태권 경공업성 부상은 개막사에서 “노동당의 뜻을 받들고 경공업부문의 공장·기업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이 소비품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언급

● 北고려항공, 전세직항편, 싱가포르 첫 취항(9/26, 자유아시아방송)

- 고려항공 특별 전세기가 9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튿날 평양공항으로 돌아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싱가포르의 북한 전문여행사인 '유니버설 관광'을 인용해 보도
- 이번 북한 고려항공의 싱가포르 직항편은 북한과 싱가포르가 지난 7월 북한 정권 수립 60돌을 기념해 9, 10월 정기적으로 전세 직항기



를 운항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며, 직항기는 10월 2일까지 모두 8차례 운행된다고 RFA는 보도

● **北 평양국제상품전 EU기업 참가 증가(9/25,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유럽연합(EU)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 전람회에 참가한 EU 기업들은 2007년 가을철전람회 8개, 2008년 봄철전람회 17개에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08년 가을철전람회엔 23개로 증가
- 평양시내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혁신관에서 열린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 기업 40여개와 외국기업 및 참관단 110여개가 참가했음.
- 북한과 유럽 기업간 교량역할을 하는 유럽기업협회 회장인 나이젤 카워 대동신용은행 총재는 EU기업의 참가가 증가하는 것은 “협회의 착실한 활동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전력증산 위해 발전소 설비보수 주력(9/22, 9/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압록강의 수풍발전소(평북 삭주군)가 설비 기술개조를 전력증산의 중요한 방안으로 설정해 1, 2호 발전기의 기계 유압식 조속기(調速機, 기관의 회전속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는 제어장치)를 능률이 높은 숫자식(디지털식) 전기조속기로 개조하는 것 등을 통해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고 보도
- 평양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평양시 락랑구역)에 선 지난 7월 1호 보일러 보수공사를 마친 데 이어 3호 보일러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
- 북한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예성강발전소를 비롯해 원산청년, 어랑천, 영원, 금야강, 백두산 선군청년, 금진강구창 발전소 등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의 조기완공을 위해 내각 건재공업성 간부들을 현지에 파견, 기술지도를 강화중임.

● **佛라파즈, 북한 시멘트공장 투자 확대(9/25, 자유아시아방송; 9/24,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 오라스콧사로부터 평양 인근의 상원시멘트공장 지분을 넘겨 받은 프랑스 시멘트업체 라파즈사는 대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라파즈의 클레어 매튜 공보담당이 25일 발표, 인터뷰에서 “라파즈는 북한 시멘트공장의 설비를 최신 것으로 바꾸고 기계와 시설투자도 더 늘릴 것”이며 “2010년까지 (상원시멘트의) 연간 생산량을 300만t 이상으로 늘릴 것”이며, “라파즈는 북한의 시멘트공장 지분은 물론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산과 탄광의 채굴권도 함께 넘겨받았다”면서 “북한의 광물 생산과 전력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
- 오라스콧은 2007년 7월 상원시멘트 지분 50%를 갖는 대신 1억1천



5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전 세계에 있는 자사의 시멘트 계열사를 모두 라파즈에 넘김.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라파즈의 브루노 라퐁 사장과 오라스콧의 나세르 사위리스 사장을 면담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간 지분 인도.인수를 환영하는 입장을 시사함.

● 노동신문, 우리도 쿠바처럼(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자기의 힘으로 재난을 가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의 신세를 지고 얽매여 눈치를 보며 사느니 좀 품이 들어도 제힘으로 일떠서는(일어서는) 것이 떳떳하고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

● 北, 경제과제 달성 “총력투쟁” 촉구(9/23,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3일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제목의 사설에서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랑찬 성과"가 마련됐다면서 연초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제시된 경제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
- 노동신문이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전후 빈터 위에서 사회주의 강국으로 비약하던 천리마의 정신,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을 맞받아 헤치며 낙원의 길을 열던 대담한 공격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신문은 이어 "농업생산을 빨리 늘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며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제때 끝낼 것과 내년도 농사준비를 실속있게 할 것을 강조
- 또 "강력한 군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제일기둥"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가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 北주민들, 美의 식량지원 인지(9/22,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방북했던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 의회측과 간담회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미국의 식량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에도 주택거래 암시장 활발(9/28, 립진강)

- 북한에서 당국의 주택 무상공급 능력 부족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부동산 암시장이 가동 중이며, 주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통의 편리성, 시장과 거리는 물론 인근 주민 수준, 텃밭의 크기 등에 따른 가격홍정을 거쳐 사고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이나 월경자 등을 활용해 북한 내부소식을 전하는 격월간지 '립진강'은 최근 발간한 통권 제3호에서 자사 기자인 '리준(가명)'씨가 북한의 주택 암거래 실태를 잘 아는 북한 주민이라며 그의 설명을 통해 북한의 주택 암시장 실태를 상세히 소개
- 리씨에 따르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 주택을 서로 교환하거나 직장 구내에 있는 살림집을 얻으면서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 등에 주택의 '사용권'이 암거래 됨. 암시장에선 교통편리 정도, 장마당과 거리, 장사관련 편의성, 수도 및 전력 공급 상황 등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며 그 다음으로 건물의 노후 정도, 내부 구조, 텃밭의 크기, 주민 수준 등도 가격 결정 변수들임. 이 때문에 북한돈 35만원에 거래된 집이 1년 뒤엔 300만원으로 폭등하기도 하는 등 매매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도 함.
- 다만 북한에서 이러한 주택거래 계약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날릴 위험이 있는 구매자는 시·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집문서인 '국가주택이용허가증'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비롯해 뒤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킴. 이렇게 위법한 거래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복잡한 매매 절차를 대행할 필요성과 함께 주택 매물 정보시장의 필요성에서 도시경영과나 보안서(경찰서), 재판소 직원과 연줄이 있는 '집데꼬'라고 불리는 일종의 부동산중개인도 존재

● 北선박, 불가리아 해역서 침몰(9/27, 러시아 교통부)

- 북한 선박 한 척이 불가리아 해역에서 침몰했다고 러시아 교통부가 27일 밝힘. 교통부는 "침몰한 선박에는 러시아 명칭이 붙어있지만 러시아 소속이 아니라 북한 선적"이라면서 "승무원들도 러시아인들이 아니다"라고 밝힘.
- 이 선박에는 12명의 우크라이나인과 1명의 러시아인 등 1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한 선박은 톨스토이호로, 이 선박은 북한 인공기를 달고 지난 21일 출항해 예게해의 터키 항구로 향해하던 중으로 사고 당시 해역에는 폭풍우가 몰아침.



종장으로, 주체의학 교육의 믿음직한 종합적 기지로 강화 발전되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했다고 평가

*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이 대학은 1946년 10월1일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로 발족했다가 1948년 9월28일 평양의학대학으로 독립해 의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등 3개 학부를 설치, 1960년에는 남한의 한의대에 해당하는 고려의학부도 신설, 1948년 10월 김일성종합대 부속병원이 평양의대병원으로 개편됐으나 평양의학대학과 별도로 운영되다가 1979년 1월 통합되면서 평양의대는 학생 교육과 환자치료, 질병예방, 과학연구 등 북한의 보건의료 전반을 이끌어 가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

● WFP, 北에 지원한 中분유 조사(9/25,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해 1월 북한에 지원한 중국산 탈지분유 300t이 영양과자, 국수 등으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게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WFP가 현지조사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WFP는 북한에 지원한 유제품이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의 22개 업체에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멜라민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에 중국산 탈지분유 가공품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 중임.
- 그러나 폴 리슬리 대변인은 “중국산 탈지분유 300t은 이미 WFP가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식품으로 모두 가공 처리됐다”면서 “남아 있는 가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학위수여제 수립 60주년 보고회(9/25, 조선중앙통신)

- 국가학위학직 수여제도 수립 60주년 보고회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행사에는 광범기 내각 부총리와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 정권 수립 60주년 전국의학과학토론회 개최(9/25, 조선중앙통신)

- 정권 수립 60주년 전국의학과학토론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이번 토론회는 외과, 내과, 고려의학, 약학, 위생방역학, 기초의학 등의 분과로 나뉘어 열렸으며 370여건의 의학과학논문이 발표

● 평양연극영화대학, 특수촬영학과 신설(9/25, 조선신보)

- 북한 연극·영화인 산실인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최근 화상기교학과, 영화음향학과, 영상가공학과 등을 신설해 특수촬영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WFP 평양사무소장 10월 교체(9/25, 미국의소리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장 피에르 드 마저리 평양사무소장을 내달 토빈 듀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5일 보도, 덴마크 출신의 듀씨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바그다드사무소장으로 2천700만명의 이라크 국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WFP 사상 최대의 긴급 구호활동을 지휘했었고, 최근까지 WFP 로마 본부에서 국가별 계획과 식량배급 문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관리국장을 지냄.
 - WFP 평양사무소장은 평양 외에도 청진, 함흥, 해주, 혜산, 원산 등의 현장 사무소를 총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재투입 핵물질은 ‘사용후 연료봉’(9/28, 연합뉴스)**
 - 북한은 영변 재처리시설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핵물질이 사용후 연료봉임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28일 알려짐.
 - 북한은 9월 24일 영변에 머물고 있는 IAEA 검증팀에게 ‘일주일 내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핵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었음. 북한이 핵시설을 복구하기 시작한 지 한달도 안돼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시설에 투입, 재가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점검과 테스트 등에만 수 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당장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해 왔음.
- **힐, 30일 방한...한미 북핵수석회의 개최(9/28,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앞두고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30일 개최
 - 힐 차관보는 30일 방한, 이날 저녁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방북에 앞서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사전조율할 것으로 28일 알려짐. 힐 차관보는 10월 1일이나 2일께 방북할 예정
- **北,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조치(9/28, 연합뉴스)**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합의 사항을 어긴 상황에서 최근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 박 부상은 “그동안 우리는 6자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핵 시설의 무력화가 다각 단계에서 추진되었고, 핵신고서도 제출됐으며 핵시설의 폐기 단계에서 하게 될 조치들까지 앞당겨 취했다”



면서 “그러나 미국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어떤 합의에도 없는 국제적 기준의 사찰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

- 그는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 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검증은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고 주장
- 또 “최근 북남 관계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출현하여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역사적 북남 선언들이 남조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정부를 겨냥하여 비난

● IAEA사무총장, 對北 제재보다는 협상 필요(9/27, 연합뉴스)

- 북한이 핵불능화 선언을 뒤집고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하면서 일부에서 대북(對北)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제재 일변도보다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IAEA) 사무총장이 26일 지적, 그는 “외교는 휘젓기만 하면 녹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다”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언급
-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어 “(당근과 채찍중) 한가지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제재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

● 北 핵시설 재가동하면 지원중단(9/25, 외교부)

-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은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와 2007년 2·13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는 유효하다”고 언급
- 유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현재 ‘휴면(休眠)’ 상태에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임. 북한이 핵 실험한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금융자산 동결 ▲민군(民軍) 이중 용도 물품과 사치품의 수출 금지 ▲WMD 관련 북한 관계자들에 대한 입국 거부 등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北, 영변 핵봉인 제거(9/22, 로이터 통신)

-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중단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치해놓은 봉인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EI Baradei) IAEA 사무총장은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22일) IAEA의 사찰



관들에게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에서 핵 물질과 관련 없는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며 봉인과 감시 장비 제거를 요구했다”며 “북한이 불능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제거됐던 일부 장비들을 원상 복구시킨 것을 사찰관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로이터는 IAEA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고위 외교관을 인용해, “핵 봉인이 이미 제거됐다”고 말했다고 보도

나. 북·미 관계

● 美, 對北 중유 공급중단 아직 고려 안해(9/26, 로이터 통신)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대북 중유공급 중단 같은 조치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라이스 장관은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단계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언

다. 북·중 관계

● 北, 中창건 59돌 기념 연회(9/27, 조선중앙방송)

- 중국 창건 59돌을 맞아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회가 26일 평양 청류관에서 기념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연회에는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와 전 주북 대사인 우동허(武東和) 중.북 우호협회 회장, 방북 중인 중.북 친선 홍성농장 대표단, 중.북 친선의료단 등이 초대됐고, 북한 측에서는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과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북).중 친선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을 위해 잔을 들었다”고 방송은 보도

라. 북·러 관계

● 北라진-러 하산 철도현대화 공사 10월 3일 시작(9/24, 러시아의소리 방송)

-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역을 잇는 철도구간의 현대화 공사가 10월 3일 시작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4일 보도
- 방송은 “조선(북)의 라진항과 러시아 국경지역인 연해변강의 하산역 사이의 철도구간 현대화가 10월3일에 시작”되며 “쌍방은 하산-라진 철도구간 현대화와 라진항 부두건설, 하부구조(인프라) 운영을 내포



하고 있는 하산-라진계획을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합영기업을 창설했다”고 보도

- 방송은 “이 계획실행의 첫 단계에서 8만대까지의 짐함(컨테이너), 즉 한국과 유럽 사이의 짐함수송의 10~15%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수송할 수 있다”며 “라진-하산 철도구간 현대화와 부두건설계획에 대한 투자액은 1억4천만유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마. 북·일 관계

● 北·日, 유엔총회장서 한바탕 설전(9/27, 연합)

- 북한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유엔총회장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임.
- 박 부상은 총회 연설에서 “조일 관계 문제가 반세기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 원인은 일본이 희대형 범죄로 얼룩진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데 있다”며 “아시아 나라들을 강점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있고, 오늘도 조선의 신성한 영토를 강탈하려 하고 있는 유일한 전방국인 일본은 절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을 정면으로 공박
- 기조연설이 끝나자 일본측 대표인 기로 코데라 일본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발언권을 얻어 “북한 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과거를 직시하고 있다”고 반박, 2차 대전 후 수차례 사과와 참회를 표명했으며 과거사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
- 그러자 박덕훈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나서 “일본 대표의 발언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평양선언 이후 북한은 진정성과 관대함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종 일본인 조사를 해 5명의 일본인과 그 가족을 돌려 보냈으며, 최근에도 실종 일본인 조사에 동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범죄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적절히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일본 대표는 참회한다고 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고 2007년 3월 당시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공박

● 日, 대북제재 6개월 연장 방침(9/27, NHK)

- 일본 정부가 9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NHK가 27일 보도
- 이는 북한핵 문제 및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것임.
-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



른 대응 조치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 수입 금지,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담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 2006년 10월 처음 부과된 대북 제재 연장은 이번이 4번째가 됨.

바. 기타외교 관계

- **北, 케냐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9/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케냐 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케냐의 모 지스 웨탕굴라 외교장관은 9월 26일 양국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코뮌িকে에 서명
 - 조선중앙방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 국제법,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1963년에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부합되게 본 공동 코뮌িকে를 서명한 날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양국간에 체결된 코뮌িকে 내용을 소개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만수대의사당에서 루마니아 사회주의당 대표단을 만나 환담(9/26,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후세인 신임 이집트 대사를 만나 환담(9/26, 조선중앙통신)**
- **北·쿠바, 경제교류 의정서 체결(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쿠바가 26일 경제교류와 관련한 두 건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보도
 -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쿠바 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위원회 제27차 회의 의정서와 2009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밝힘.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용남 무역상이, 쿠바측에서 호세 마누엘 몬타노 북한 주재 대사가 각각 참석했으며 이들은 의정서에 직접 서명
- **北김영남, 베트남 軍대표단 면담(9/2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레 반 중 총정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군 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동지와 농 득 마잉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조선과 베트남 사이의 친선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이라며 “그러나 남북은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

● 15년간 국군포로 74명 탈북(9/27, 통일부)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입수한 ‘국군포로 탈북 귀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4~2008년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74명으로 집계됨.
- 연도별로는 1990년대에는 연간 1~4명에 그쳤으나 2000년 9명, 2004년 14명, 2005년 11명, 2006년 7명, 2007년 4명 등으로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남.

● 개성공단·금강산 인명사고 389건(9/25, 연합)

- 소방방재청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윤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북한지역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후 8월말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각각 364건과 2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 개성공단에서 6명, 금강산에서 15명의 한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 12건이었던 인명사고는 2005년 33건, 2006년 102건, 2007년 131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올해 8월말까지만 8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 이로 인한 한국과 북한측 사상자는 각각 223명과 141명이었으며, 사망자는 각각 6명과 9명이었음.
- 사고 유형별로는 산업재해가 3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통사고 43건, 형사사건 11건 등 순임.

●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정상선언 1주년 공동행사 무산(9/24, 연합)

- 23일 개성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장 회의에서 남북정상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 개최 방안을 협의했으나 북측이 빠듯한 일정 등의 여러 어려움을 들어 공동행사가 무산돼 지난 8.15 행사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각각 열기로 결정, 이에 따라 남측위는 9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토론회를 열고 10월 4일에는 서울에서 ‘1004열차’를 타고 임진각에서 기념식을 갖는 프로그램을 준비, 남측위는 11월 중순 중국 선양(瀋陽)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개최할 계획

● 8월 개성관광객 전월대비 36% 감소(9/24, 연합)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의 영향 등으로 지난 8월 개성 관광객이 전월에 비해 3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8월중 개성 관광객은 7천447명으로, 7월 1만1천607명에 비해 35.8% 줄어들었음. 7월에는 6월(1만2천161명) 보다 개성관광객이 4.5% 감소
- 대북 관광객 및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체류인력, 개성공단



- **李대통령, 남북간 기존합의 정신 존중(9/22,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북 지역회의에서 홍종길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고 “북한은 남북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

- **통일부차관, 대북자재지원, 10월 중순까지 관망(9/22, 연합)**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2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착수에 따른 대북 상응조치 이행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힘. 홍 차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북 에너지·자재 지원 문제에 대해 결정할 바 없다”고 소개한 뒤 “자재 생산이 10월 중순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고 봐야겠다”고 답변
 - 정부는 현재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에 제공키로 합의한 설비·자재 중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 중 1천500t의 생산을 마쳤고 다음 달 중순까지 나머지 1천500t을 생산할 예정임.
 - 홍차관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이미 밝힌 바 대로 인도적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시기, 규모, 방식에 관해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
 - 또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대북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 출범 때 이야기했고, 남북자의 가족들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
 - 그는 또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 이행에 14조원이 들어간다는 통일부의 내부 추정 결과에 대해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북한 당국과 만나 협의를 통해 사업범위, 사업기간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숫자는 추정치이고 개략치에 불과하다”고 언급

- **KBS, 7년간 남북방송교류에 189억원 투자(9/28, 연합)**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28일 “KBS가 지난 2000년 이후 7년간 남북방송교류사업에 총 188억8천 2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힘.
 - 최 의원이 이날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남북방송교류사업 현황’에 따르면 KBS는 남북방송교류사업에 2000년 44억7천600만원, 2001년 46억5천만원, 2002년 46억1천200만원, 2003년 23억5천만원, 2004년 6억6천만원, 2005년 이후 21억3천400만원 등을 사용
 - 특히 남북방송교류사업 투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집중됨.. 전체



188억8천200만원 가운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투입된 금액은 72.7%에 해당하는 137억3천800만원이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51억4천400만원에 그침.

- 세부 투자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한해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 및 특별기획 등 2건에 18억4천700만원의 제작비용과 함께 TV 2만대(25억6천900만원), 취재용 차량 3대(6천만원) 등을 현지 제작비 개념으로 사용했고, 2001년에는 5건의 특집 프로그램 기획 등에 46억5천만원을 투입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조치”(9/28)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합의 사항을 어긴 상황에서 최근 우리는 부득불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상은 “그동안 우리는 6자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핵 시설의 무력화가 다각 단계에서 추진되었고, 핵신고서도 제출됐으며 핵시설의 폐기 단계에서 하계 될 조치들까지 앞당겨 취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어떤 합의에도 없는 국제적 기준의 사찰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그는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 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검증은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 박 부상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의 존엄과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고 하는 것은 9.19 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 조선반도 대화를 집어 던지고 서로 총뿔리를 맞대고 있는 일방인 우리만 폐배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 라이스 “美, 對北 중유 공급중단 아직 고려안해”(9/27)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대북 중유공급 중단 같은 조치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라이스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단계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 라이스 장관은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가 2020년까지 우주방어, 핵잠수함을 포함한 새로운 핵억지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러시아의 핵 억지력 향상이 강대



국들 힘의 균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 억지력 차원에서 세력균형은 그런 조치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굳건한 핵 억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前 CIA 요원 “북한 이미 핵탄두 개발했을 수도”(9/26)

-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직 요원이 26일 주장했다.
- 지난 2005년까지 CIA 동아시아국장을 역임했던 아서 브라운은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 기정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브라운 전 국장은 “미국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7년이 걸렸고 러시아는 6년이 소요됐다”며 북한 역시 이 기술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IAEA사무총장 “對北 제재보다는 협상 필요”(9/26)

- 북한이 핵불능화 선언을 뒤집고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하면서 일부에서 대북(對北)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제재 일변도보다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IAEA) 사무총장이 26일 지적.
-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과 인터뷰에서 “지난 90년대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지만 그후 대화가 수년동안 중단되면서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외교는 휘젓기만 하면 녹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다”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근과 채찍중) 한 가지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제재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美, 북한에 무리한 핵검증 프로그램 강요<WP>(9/26)

- 북한이 최근 영변 핵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지나치게 엄격한 핵검증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단독 입수한 4장짜리 서류를 인용해 26일 이같이 보도.
- 이 서류는 북한내 핵개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에서 “모든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요구하는 제안을 담고 있으며 미 국무부 무기통제 전문가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지점과 시설,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요구하는 한편 조사관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뿐 아니라 필요시 얼마든지 머무르면서 지속적



으로 의심 지역을 방문해 표본을 수집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했음.

● “對北 핵검증 요구수준 부담 안돼” <미국무부>(9/26)

- 미 국무부는 25일 북한에 대한 핵검증 요구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 시도를 철회하고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능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의 표준이며 부담스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없던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음.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이를 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만 한다”고 말했음.

● 中, 북핵 6자회담 “일부 어려움” 인정(9/25)

- 중국은 최근 중대 기로에 선 북핵 정세와 관련, 북핵 6자회담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했음.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 재가동을 선언한데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6자회담의 정세는 진전의 기회임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일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류 대변인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전면적으로 2단계의 남은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6자회담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 류 대변인은 북한에 제공되던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연될 것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정식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사실상 부인했음.

● 라이스 “北조치로 6자회담 끝난 것 아니다”(9/25)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4일 핵시설 재가동 방침 통보 등 최근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역행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조치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음.
- 라이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카타르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방침 통보가 6자회담을 무용지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by no means)” 라면서 “우리는 그간 6자회담 과정에 많은 부침을 경험해왔다”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만약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이곳(뉴욕)에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및 회담계획을 소개했음. 라이스 장관은 “우



리는 검증 의정서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특히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게 그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체제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북한, 핵재처리시설 일주일내 가동(9/24)

- 북한은 일주일내에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했다고 IAEA가 24일 밝혔음. 올리 하 이노넨 IAEA 사무차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3일째 열리는 IAEA 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일주일내에 (영변)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검증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이 전했다.
- 플레밍 대변인은 또 북한의 요청에 따라 “검증팀이 오늘 재처리 시설과 인접 지역에 있는 봉인과 감시장비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면서 북한은 이와 함께 “검증팀이 앞으로 재처리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음.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위협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는 이번 조치로 IAEA는 앞으로 영변의 재처리시설 관련 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됐음.

● “북한, 이란 핵개발 지원” <獨紙>(9/24)

-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이란의 미사일 핵탄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신문 디 벨트가 24일 보도.
- 디 벨트는 이란의 해외 반정부단체인 ‘이란민족저항평의회(NWRI)’의 발표를 인용, “북한 전문가들이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 그리고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발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 NWRI의 알리 사파비 대변인은 “수십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으며 일부는 수개월동안 이란에 머물기도 했다”고 설명. 6년전 이란내 나탄, 아라크 지역의 핵시설 존재를 국제사회에 폭로한 바 있는 NWRI는 또 이 단체의 정보원들이 테헤란 인근 호드쉬르 지역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길이 1km, 폭 12m 규모의 지하시설을 발견했다면서 수개의 유명회사들과 전문가들이 미사일과 탄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 사파비 대변인은 IAEA 사찰단이 이 시설을 조사하면 핵물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핵재처리시설 일주일내 가동(9/24)

- 북한은 일주일내에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했다고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이



24일 밝혔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IAEA 검증팀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서 봉인과 카메라 장비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위협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는 이번 조치로 IAEA는 앞으로 영변의 재처리시설 관련 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플레밍 대변인은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북한 상황을 브리핑한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일주일내에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검증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 “오늘 영변 재처리 시설의 봉인 및 감시장비 제거가 완료됐다”면서 “북한은 IAEA 검증팀에 ‘앞으로 재처리 시설에 대해 더이상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AEA 검증팀은 앞으로도 영변에서 원자로와 다른 핵관련 시설의 가동 중단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됨.
- dpa통신은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재처리시설에서 약 100개의 봉인과 25기의 감시카메라가 제거됐지만 사용후 연료봉은 아직 봉인 상태에 있다면서 이같은 핵물질의 봉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IAEA에 다시 제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북한, IAEA 사찰팀 철수 요구(9/24)

-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에 철수를 요구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임을 통보해왔다고 빈의 외교관들이 24일 밝혔다. 외교관들은 IAEA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현지의 IAEA 사찰팀에 떠나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 외교관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을 공언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원자로 안에 핵물질을 재장전할 계획임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 IAEA의 멜리사 대변인도 “영변 핵시설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봉인과 감시 카메라 장비를 제거했다”며 “재처리 시설에 더 이상 IAEA의 봉인과 감시 장비들은 없다”고 말했다.

● 부시 “유엔, 北.이란 제재 충실히 이행해야”(9/24)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유엔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핵프로그램 관련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핵 야욕에 국제사회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재임 중 마지막이 될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0’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두기만 해도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테러리스트에 대한 심판이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최상의



방안”이라며 테러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 부시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계속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

● 힐 “영변外 지역 방문 수단 확보해야”(9/24)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2일(미국시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 등 최근의 상황에 대해 “6자회담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라며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야만 할 때”라고 밝혔다.
- 힐 차관보는 이날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이슈를 더 파고들면 더욱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어려운 지점을 통과했듯이 이번에도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 힐 차관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지는 현 상태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검증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체계 문제와 관련, “북한은 서류작업, 인터뷰, 현장방문 등 3가지 검증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했지만, 영변 이외 시설을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밝혀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한 추가방문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부시 “유엔, 北.이란에 제재 가해야”(9/24)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유엔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핵 야욕에 대해 국제사회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재임 중 마지막이 될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시 대통령은 또 “시리아와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계속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 그는 “노예제와 약탈과 같은 테러는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한국, 대북 철강재 지원 연기”<넬슨리포트>(9/23)

-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신고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려던 철강재 3천t의 지원을 연기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워싱턴 정보지 ‘넬슨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주말 철강재 지원 연기방침을 북한과 미국에 통보. 한국 정부는 자동용접강관 3천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북한



이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불능화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넬슨리포트는 전했다.

● “北, IAEA 봉인제거 요구로 불안 가중” <WP> (9/23)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6자회담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22일 국제핵사찰단원들에게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3일 보도.
-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는 전날 북한의 이 같은 요구로 현재 벌이는 외교적인 노력이 2007년 북핵협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포스트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핵불능화와 관련, 아직 되돌릴 수 없는 조치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단계적 행동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북핵 6자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韓美.韓中 외교장관 회동..“북핵 긴밀 협력”(9/2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및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복구 움직임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 유 장관은 이날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라이스 장관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이어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라이스 장관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복구하는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장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복구 움직임에 우려를 같이 하고 북한의 불능화 재개를 통해 2단계 비핵화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 北, IAEA에 핵시설 봉인 제거 요청(9/22)

-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22일 밝혔다.
- 엘바라데이 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에서 개최 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북한이 IAEA 사찰요원들에게 재처리 시설에서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봉인과 감시장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 로이터 통신은 IAEA와 밀접한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봉인이 이미 제거됐다고 보도했으며 dpa통신도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봉인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 엘바라데이 총장은 또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 북한측이 제거했던 일부 장비들도 원상복구됐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 상태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명. 그는 “한이 가능한 한 조속히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조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부시.후진타오, 북한 비핵화 설득키로 합의” <백악관>(9/22)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북한이 지난 6월 협정에 따라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2일 밝혔다.
- 고든 존드로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동결한 영변 핵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후 주석에게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두 국가 지도자들은 북한이 비핵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설득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리’ 언론, 北 핵시설 봉인제거 요청 보도(9/22)

-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감시카메라와 봉인 제거를 요청해 왔다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포기에 우려를 표명. 통신은 또 현학봉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지난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남북실무협약에 앞서 핵시설 복구 문제와 관련한 발언 내용도 함께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美의회, 북핵 폐기비용예산 5천만달러 삭감” <RFA>(9/28)

- 미국 상하 양원의 세입.세출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에너지부에 추가로 배정했던 북핵 폐기비용 5천만달러를 전액 삭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이 방송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당초 배정했던 북한 핵 폐기 비용 5천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며 “상원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지난 23일 삭감한 북핵 폐기 비용 5천만 달러는 상원 국방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짜면서 미국 에너지부에 추가로 배정했던 예산”이라고 밝혔다.
- RFA는 미 의회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북한이 핵 시설 검증체계 수립에 반대하고 급기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상.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북한 핵시설 폐기가 당



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초 배정됐던 5천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다.

- 이 방송은 “상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북한 핵시설 폐기 예산 삭감은 미국 의회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6자회담이 다시 진전되면 미국 의회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북한 핵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 에너지부는 200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인 올 초에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지만,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북한 핵 폐기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회에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며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에너지부가 요청한 북핵 폐기 예산을 받아들여 북한 핵폐기 예산으로 5천만 달러가 추가 배정했었음.

● “힐 차관보 내주 북한 방문” <미국무부>(9/28)

-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취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7일 밝혔음.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수행, 뉴욕에 머물고 있는 국무부 손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힐 차관보가 오는 29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뒤 북한을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 국무부가 전했다.
- 북한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에 불만을 나타내며 핵신고서 제출내역에 대한 검증체제 합의를 거부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방침을 통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카메라 및 봉인을 제거하고 IAEA 검증팀 출국을 명령한 가운데 힐 차관보의 방북이 이뤄지게 돼 주목됨.

● 美인권부특사 “北자유화 지원 강화될 것”(9/26)

- 크리스천 휘튼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부특사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으로 대북 자유화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휘튼 부특사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교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특히 “북한 당국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불허하고 외부 방송 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라디오를 몰래 듣고 외부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그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진실은 자유를 배가시킨다”며 “대북방송 매체를 통해 (북한에서) 자유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휘튼 부특사는 국제회의 연설에서 “민주주의 확산은 미국 국가안보



써 의회 심의과정을 마쳤음. 이에 앞서 미 상원은 22일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잇따라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미 의회는 조만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이송할 예정. 부시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음.

-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0월 19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10개월 뒤인 지난 2005년 8월 19일 이 법에 따라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했음.

● “北인권대사, ‘북한판 헬싱키프로세스’ 마련해야”(9/24)

- 해리 리드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에 의해 정규직 ‘대사’로 임명되는 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시켜 해결하는 이른바 ‘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리드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에서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리드 대표는 “새 북한인권대사가 한국 및 다른 북한의 주변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탈북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런 노력과정에 새 북한인권대사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로부터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그 교훈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상황에 잘 맞춰진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음.
- 리드 대표는 또 새 북한인권대사가 떠안게 될 북한인권 관련 과제로 재미한국인의 북한이산가족 상봉문제, 북한내 종교탄압중단, 북한의 식량안전 및 공중보건문제 등을 언급했음.

● 美의회, 북한인권법 연장안 처리(9/24)

- 미 상원은 22일(미국시간)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수정안을 의결. 미 하원은 23일중 상원을 통과해 넘어 온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상정해 처리함.
- 미 의회관계자는 “하원에서도 오늘 중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서 북한 인권특사의 역할과 관련해 ‘탈북자 관련 업무를 조정(coordinate)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탈북자 관련 문제의 정책수립과 이행에 참여(participate)한다’는 조항을 삽입, 사실상 특사의 권한을 축소시켰음. 또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되 상원의 동의와 조언을 듣



도록 했음. 수정안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도 당초 연간 4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낮췄음.

● “北서 김정일 와병설은 금기..아무도 말 안해” <LAT>(9/24)

-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은 금기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이 소식을 모르는 것 같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3일 보도.
- 신문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알려진 후 평양 시내 분위기를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너무나 금기시돼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북한 통역원이 아예 통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매일 전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선물이나 축전을 받았다는 내용.
- 평양 시내에 특별히 이상한 분위기가 없었으며, 지난주부터 시작된 평양영화제와 김일성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야간 공연으로 평소보다 더 축제분위기였음. 신문은 “일반인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듣지 못한 것 같고, 그 소문을 들은 일부 사람들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제사회, 北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해야”(9/23)

-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협상에 치중하느라 북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해왔으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NGO)가 22일 보고서를 통해 주장.
- 미국내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CHRNK)’와 ‘DLA PIPER’, ‘오슬로 센터’ 등은 이날 ‘보호의 실패:북한의 지속되는 도전’이라는 제하의 북한 인권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 보고서는 먼저 6자 회담 참가국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제외한 모든 실무그룹과 6자회담의 보조적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대북식량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대화를 강화하고 경협을 확장할 것 등을 권고했음.

● 북한인권상황 비판 새 보고서 발표(9/23)

- 유엔과 국제적인 핵협상에 참여중인 국가들이 절망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22일(현지시간) 발표. 체코와 노르웨이 및 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동으로 주도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인권 전문가 그룹을 임명할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촉구하고 있음.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조속한 시일내 북한을 방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있음.

● 美 “대북중유제공 중단할 때 아니다”(9/23)

- 미국 정부는 22일 북한이 불능화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데 대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제를 수용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 미국은 또 북한의 영변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맞서 대북중유제공을 중단할 지 여부와 관련,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
-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핵시설 재가동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를 요청한 데 대해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향후 며칠간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 기타

● “베네룩스 기업들, 대북진출 모색”<RFA>(9/23)

-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 상공회의소’가 중국기업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방송은 유럽과 중국의 크고 작은 600여개 기업이 가입한 단체인 베네룩스 3국 상공회의소가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투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베네룩스 국가들의 북한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을 찾기 위해 설명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 설명회는 “이번주 열린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뒤를 이어 대북 투자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설명회에서는 ‘북한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대북 투자 성공 가능성이 논의되며 북한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설명 및 개성공단엔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사례 소개 등이 예정돼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힐, 30일 방한..한미 북핵수석회의 개최(9/28)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앞두고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30일 열림.
- 힐 차관보는 30일 방한, 이날 저녁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방북에 앞서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사전조율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다음달 1일이나 2일께 방북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재처리시설 재가동을 공언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방북에서 힐 차관보는 검증체계와 관련해 보다 유연해진 방안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방북 결과가 주목됨.

● 한 총리, “한·미FTA 금융위기 타개에 도움”(9/25)

- 제6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가 24일(현지시간) 현지 경제계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경제외교’에 박차를 가했음.
- 한 총리는 현지 교포 간담회와 폭스뉴스 인터뷰에 이어 미국 재계의 유력인사들이 참석한 ‘한·미 FTA 재계연합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도 잇따라 참석, 한·미 FTA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씨티은행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 FTA는 양국 경제에 모두 이득이 되는 만큼 제대로 비준 동의될 수 있도록 재계에서 협조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음.

● 스티븐스 美대사 “北인권, 한·미 공동 노력해야”(9/25)

-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가로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북한인권콘서트’에 참석, 음악회를 주최한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말에 한국말로 “같이 노력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 스티븐스 대사 “한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9/23)

-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가진 부임 회견에서 “33년 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처음 왔었는데 주한 미 대사로 한국에 다시 오니까 가슴이 정말 벅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첫 여성 미국대사인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 연방기구인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파견돼 예산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주한 미대사관과 부산 영사관 등에서 근무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에 1970~80년대 살았던 경험, 한국에서의 평범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는 행운이 있었으며 이런 경험들이 저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 3차 방위비협상 24~25일 워싱턴 개최(9/22)

- 한국과 미국은 내년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협의를 24~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비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
-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수준인 ‘공평한 수준’(50%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내년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내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 한·러 관계

● 한·러, 광물자원개발·산업기술협력 합의(9/26)

-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가 광물자원 개발 및 지질연구 등에 관한 협력 약정을 체결기로 했음. 또 모스크바주(州)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비롯해 자동차분야 산학협력, 차세대 광가입자망 공동연구 등 투자, 산업기술, IT(정보기술) 분야 협력 약정도 체결돼 향후 양국 경제협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청와대는 26일 “한러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 방문기간(09월28일~10월1일)에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 등이 산업·자원분야에서 13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러기간 지식경제부는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와 ‘광물자원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지질연구, 광물자원 매장량의 탐사 및 측정, 광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등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할 예정.

● **李대통령 28일부터 러시아 공식 방문(9/22)**

-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음.
- 이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을 모두 둘러보게 됨.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방문 다음날인 29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북핵 사태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뒤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
- 양국 정상은 또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남·북·러 3각 사업과 우주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원자력 협력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위성 발사체 공동 개발을 위한 30여건의 협정도 이뤄질 전망.
-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중장기적·안정적 도입과 서캅차카 해상광구 공동개발 지속, 우리 기업의 러시아 유망광구 참여 등이 집중 모색.
-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2012년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둔 인프라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 문화·학술·청소년·체육 교류 확대 등도 강구된다. 양국 간 단기시증발급협정과 광물자원협력약정 등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음.
- 이 대통령은 방러 첫날인 28일 동포간담회와 모스크바 시장 접견, 러·한 친선협회 만찬 등에, 29일에는 정상회담 외에 한·러 비즈니스 포럼, 러시아 언론인과의 간담회, 메드베데프 대통령 주최 만찬 등에 각각 참석. 이어 30일에는 후르니체프 우주센터 방문,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면담을 가진 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연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귀국.
- 29일 정상회담 직후에는 러시아의 실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다. 미·중 관계

● **후진타오, 부시에 “금융위기 극복 희망”(9/22)**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경제·금융 위기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주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간주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 처음으로 이뤄진 두 정상간의 접촉.



- 관영 신화통신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날 오전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미국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조속히 효과를 발휘해 미국의 경제·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호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후 주석은 “조속한 위기 극복은 미국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최근의 미국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 중·일 관계

● 후진타오, 中日 경제협력 강화 다짐(9/22)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후 주석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중·일경제협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국내외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 후 주석은 “중·일 양국은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크다”면서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에너지 환경 문제와 정보통신, 첨단기술, 재해 대응 등 각종 영역에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 후 주석은 쓰촨(四川)성 지진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원조와 베이징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중·일 경제협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 기타

● 한-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 개최(9/25)

- 이상희 국방장관과 테오 치 힌(Teo Chee Hean)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25일 오후 서울에서 회담하고 양국 군사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간 교류협력의 기본 틀이 담긴 ‘국방협력협정’ 체결과 양국 공군간 정례회의체 개설을 제안했으며 테오 장관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간 정례회의체 가동 문제와 관련, 앞으로 참석자 수준과 회의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 장관은 이번 회



답에서 동북아·동남아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군 간 상호관심사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하고 군사교류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테오 장관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어느 사람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고 양국의 군사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회담에서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싱가포르 국방장관 22~26일 방한(9/22)**

- 테오 치 힌(Teo Chee Hean)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이상희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22~26일 공식 방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테오 치 힌 장관은 방한 기간 이 장관과 회담하고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간 국방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판문점과 광주 공군기지, 해군작전사령부 등 군부대도 방문할 계획.
- 국방부는 “이번 장관회담은 지역 안보정세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관계연구실 제공